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8년 1월 31일

제08-04호

인도의 최근 FTA 정책 변화와 시사점

이순철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sclee@kiep.go.kr, Tel: 3460-1025)

최윤정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Tel: 3460-1039)

주요 내용

- ▣ 인도는 2000년 스리랑카와의 FTA를 필두로 2003년 태국, 2005년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한국, 일본, EU, ASEAN과는 FTA 협상을, 러시아, 호주, GCC 등과는 FTA 공동연구를, 중국과는 낮은 수준의 양자무역약정(Regional Trading Arrangement)을 추진하는 등 최근 동시다발적이며 다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음.
- ▣ 인도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한편, 제조업시장 개방은 최소화하면서도 투자 및 기술 협력을 달성하고 자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인력이동 등을 포함한 서비스 협력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FTA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인도는 FTA 협상에서 민감 및 양허제외 품목 확대, 원산지규정 강화 등을 통해 상품 시장 개방의 영향을 축소하고 있음. 반면 투자 및 기술 협력, 서비스시장 개방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EU, 미국 등과의 FTA에는 매우 적극적임.
- ▣ 이와 같은 인도의 FTA 정책 변화는 교역 확대, 열악한 제조업 보호, 투자 및 기술 유입 확대,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달성함으로써 8%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제조업에 불리한 태국, ASEAN, 중국 등과의 협상은 지연되고, 투자, 서비스, 자원 협력에 유리한 한국, 일본, GCC 등과의 협상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 인도의 FTA 정책은 주요국과의 투자 및 기술, 비교우위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방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적인 FTA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한국은 한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을 충분히 살리는 한편 다양한 국가 및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토대로 FTA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고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1. 인도의 FTA 정책 변화와 추이

가. 다각적 FTA 추진

- 최근 인도는 주변국 중심의 소극적인 대외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 및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거나 공동연구 및 논의를 하는 등 FTA 정책에 변화를 보이고 있음.
- FTA 체결국으로는 스리랑카가 유일했던 인도는 2003년 태국과 FTA의 일환으로 82개 품목에 대한 조기관세자유화를 실시한데 이어, 2005년에 싱가포르, 2006년에 역내 협력체인 남아시아지역공동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과 각각 FTA를 체결하였음.
- 현재 인도는 ASEAN, 한국, 일본, EU, 모리셔스와 FTA 협상 중에 있으며, 호주,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과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MERCOSUR, IBSA 같은 개도국 협력체와의 FTA 논의도 진행하고 있음.

표 1.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현황(2008년 1월 기준)

체결	협상 진행	공동연구 및 검토
스리랑카, 태국, 싱가포르, SAARC	ASEAN, 한국, 일본, EU, 모리셔스	미국, 중국, 칠레, 호주,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캐나다, 뉴질랜드, BIMSTEC, GCC, IBSA

주: 1)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은 1997년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부탄 등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6개 개도국이 결성한 지역협력 연합체임.

2) IBSA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간의 협의체임.

자료: 인도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홈페이지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 및 보도자료

- 그러나 인도가 추진하는 FTA는 대상국별로 포괄적동반자협정(CEPA) 또는 경제협력협정(CECA)과 같이 투자와 서비스를 포괄하는 폭넓은 것에서부터, 낮은 수준의 양자무역약정(RTA: Regional Trading Arrangement)이나特惠무역협정(PTA)처럼 제한된 수준의 시장 개방만을 허용하는 형태까지 다양하고 차별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¹⁾
 - 중국과는 FTA 공동연구를 마친 뒤에도 인도-중국 지역무역약정(India-china Regional Trading Arrangement)을 추진하고 있으며, SAARC 회원국 중에서도 스리랑카와는 최초의
-
- 1) 인도가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과 추진하고 있는 FTA는 무역자유화 외에 서비스시장 개방, 투자 및 기술 협력까지를 포괄하는 광의의 FTA로, 그 명칭도 포괄적동반자협정(CEPA) 또는 경제협력협정(CECA) 등으로 상품시장 개방에 중점을 두던 기존의 FTA와 차별화하고 있음.

FTA를 체결한 반면 방글라데시와는 PTA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힘.

나. 상품 개방 분야 및 범위 축소

- 인도는 공격적으로 FTA를 추진하면서도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감 및 양허제의 품목의 수를 늘리는 한편 원산지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상품 개방의 분야 및 범위를 축소하고 있음.
- 인도는 태국 및 싱가포르 이후의 FTA 협상에서 조기관세자유화 논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개방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제(Tariff Related Quota)를 운영하여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양허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원산지규정에서는 최종생산물 가격 기준 부가가치의 최소 40% 이상 및 세목변경시 HS 상품 코드 4단위 기준 적용, 또는 최종생산물의 부가가치 35% 이상 및 세목변경시 HS 코드 6단위 기준 적용 등 높은 수준의 원산지 보호 규정을 요구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업부문 보호가 어려운 경우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FTA 논의를 연기하기도 함.
- 태국, ASEAN 등과는 높은 수준의 민감 및 양허제의 품목 설정, 원산지규정을 요구하면서 FTA 체결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중국과의 FTA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인도시장을 잠식할 것을 우려하여 FTA 공동연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개시하지 않고 있음.

다. 투자 및 기술 협력 강조

- 최근 인도의 FTA 정책에서 투자 및 기술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인도는 상품교역면에서 자국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투자 및 기술 협력을 통한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음.
- 일례로, 인도가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인도 투자와 기술협력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계산 아래 일본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미국, EU 등 선진국과 FTA를 추진하는 주요 이유도 투자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제3국 투자의 시발점인 모리셔스와의 FTA를 추진하는 배경 역시 투자유입 촉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과의 통상관계에서도 상품교역까지 포함한 FTA를 추진하기보다는 투자와 인력이동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라. 인력이동 및 서비스 협력 확대

- 인도는 2005년 6월 체결한 싱가포르와의 FTA부터 금융서비스, 투자 및 인적교류 등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지향하는 FTA를 추진하고 있음.
- 인도는 싱가포르와 CECA 협상에서 금융, 통신 등은 물론 IT, 디자인, 건축, 바이오, 우주항공, 의료 등의 분야의 인력이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개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국간 CECA 체결 후 실제로 인도 금융부문에 대한 싱가포르 FDI 유입은 크게 확대되었음.
- 한국, 일본과의 FTA에서도 회계, 의료, 교육, 법률 등의 분야에서 인력이동 및 전문직 상호인정을 요구하는 등 최근 인도는 FTA 협상에서 IT, 엔지니어링, 의사, 간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 개방과 강도 높은 서비스부문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음.

마. 에너지 및 자원 확보

- 인도는 수력발전, 석유 등 자원 및 에너지 안보협력을 위하여 역내 협력기구인 SAARC 및 GCC, IBSA 등 자원부국들과의 FTA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 SAARC 내 협력 중 SAFTA는 교역 확대의 의미보다는 에너지 잉여생산국인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등과의 협력을 통해 풍부한 수력발전을 활용하기 위한 의미가 가장 크고, 역외 자원부국인 GCC 국가 및 IBSA와의 FTA 협의에서도 에너지, 자원 분야 등의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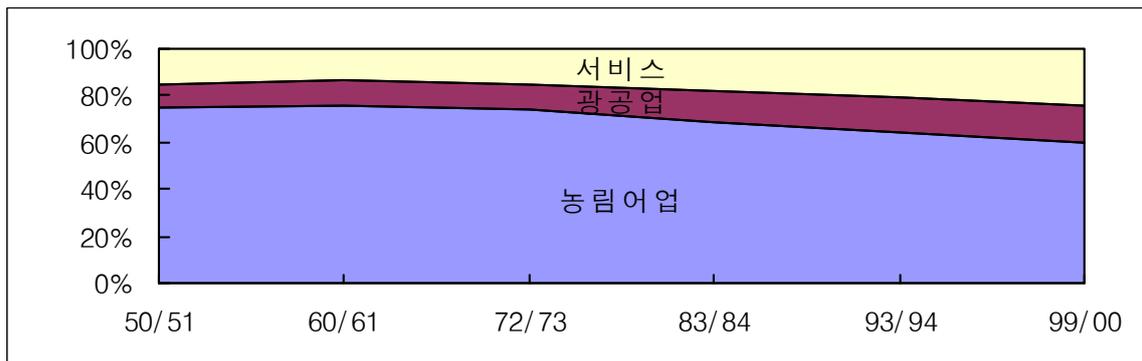
2. 인도 FTA 정책 변화의 배경

가. 신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비전 실현

- 최근 인도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게 된 데에는 교역 확대를 강조하는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이 크게 작용했음.
- 2004년 인도 정부가 대외경제정책을 집대성하여 발표한 국가대외무역정책 5개년계획 (National Foreign Trade Policy 2004-2009)에서 교역을 인도 경제발전의 기폭제로 활용하는 한편, 수출을 통해 비농업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대외 경제정책의 목표를 명시하였음.²⁾
- 동 계획하에서 인도 정부는 전 세계 교역에서 인도의 비중을 2004년 기준 0.7%에서 2009년까지 2%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과 수입을 연평균 16.0%와 12.1%씩 각각 증가시키는 한편 비농업부문의 고용을 매년 6% 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FTA를 통한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그림 1. 인도 산업별 노동인구 비중

(단위: %)



자료: Government of India(<http://mospi.gov.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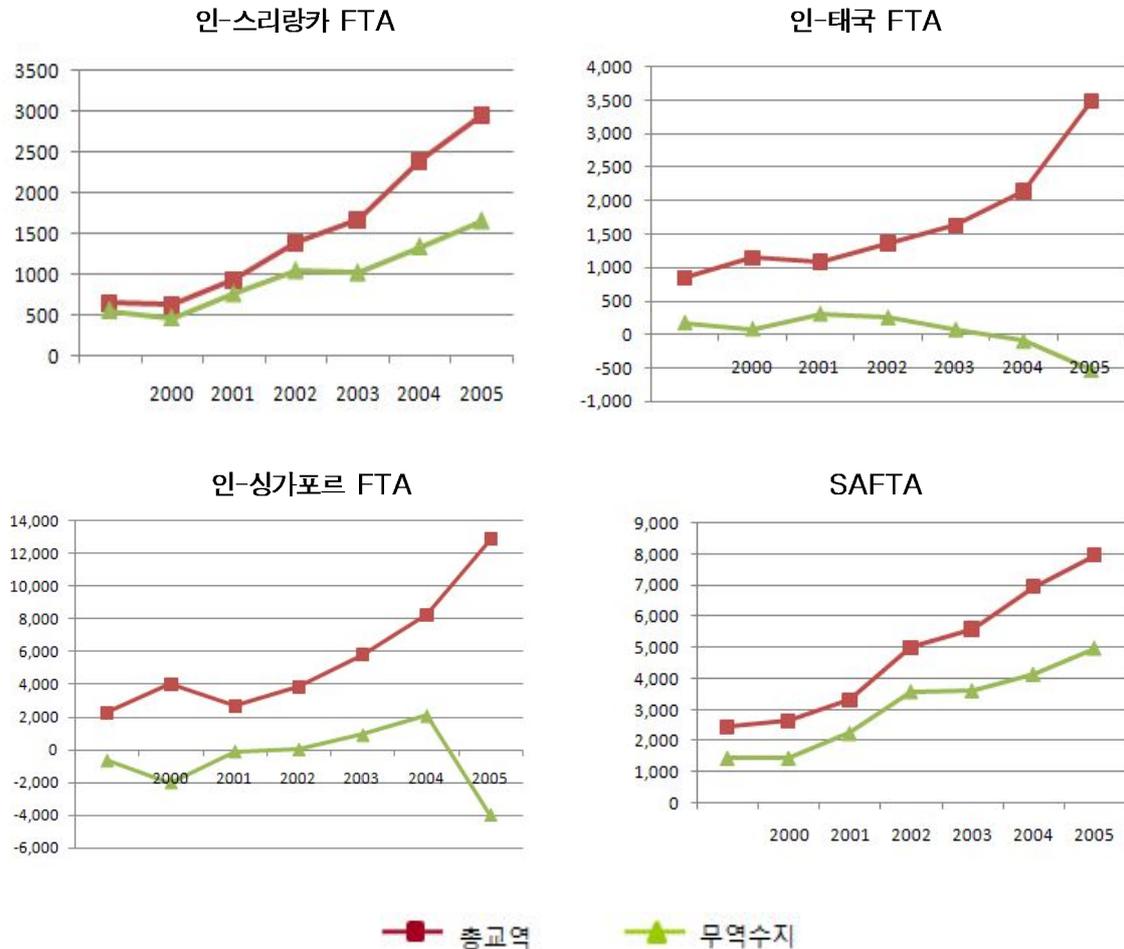
나. 제조업 보호

- 인도의 제조업은 도로, 항만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와 공장 등 생산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체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여타의 개도국 중에서도 발전 수준이 매우 낮아, 정부와 업계 모두 제조업분야의 시장 개방에는 매우 소극적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태국과의 FTA 조기관세자유화 실시 이후 무역수지가 큰 폭의 적자로 전환되는 등 FTA 체결국과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상품시장 보호를 위한 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짐.

2) 인도의 인구는 2006년 말 11억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인력은 1차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청년층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선결과제로 거론되고 있음.

- 역외국 중에 인도의 첫 번째 FTA 체결국인 태국은 인도의 무역수지 흑자국이었으나, 82개 품목에 대한 조기관세자유화를 시행한 이듬해인 2005년부터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어 2006년에는 총 5억 달러의 적자(수출은 4억 달러, 수입은 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특히 조기관세자유화 대상이 된 인도의 10대 수입상품 중 비전자 기계류를 제외한 전 품목의 수입이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대태국 주요 수출품인 화학제품, 광물, 제철, 약품 등의 수출량은 대폭 감소하였음.
- 또한 조기관세자유화 시행 후 일본 소니사가 인도공장을 폐쇄하고 태국으로 이전하여 생산한 제품을 인도에 수출하는 등의 역효과가 나타나면서 좌파 등을 중심으로 한 정계 및 산업계의 FTA에 대한 반감은 더욱 깊어졌음.

그림 2. 인도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 변화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역외국 중에 두 번째로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와의 교역도 2006년 수입이 2.7배 증가(84억 달러)하여 40억 달러의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 이에 따라 인도는 자국의 열악한 제조업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FTA에서 조기관세자유화 없이 양허제외 및 민감품목 수 확대, 원산지규정 강화 등을 통해 오히려 상품시장 개방의 폭을 축소하고 있음.

다. 비교우위 부문 집중 공략

- 인도는 투자, 기술협력, 서비스부문 및 인력이동 등 자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개방 및 협력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 인도는 2003년 이후 5년간 연평균 8%가 넘는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11억에 가까운 인구 중 청년층은 약 75%, 중산층은 약 30%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투자지로 각광을 받고 있음.
- 거대한 시장과 함께 IT와 같은 지식산업분야 전문인력이 저렴하고 풍부하며, IT 소프트웨어, 의료 및 제약, 우주항공과 같은 분야의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임.
- 이와 같은 투자지로서의 이점을 FTA 협상에서도 적극 활용하여 가장 낙후된 인프라 분야는 물론이고 전 분야에 걸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인하고 있으며, 투자 의사를 보이는 국가와의 FTA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실제로 일본이 중국 및 동남아에 직접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이 지역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하였다는 점이 인도가 일본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IT, 금융, 엔지니어링, 의사, 회계사 등의 서비스분야는 제조업분야와 달리 FTA 대상국들에게 공격적으로 개방을 주장하고 있음.
- 최초로 인력이동 등 서비스 및 투자 부문 협상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싱가포르와의 FTA가 발효된 이후 무역수지 적자를 상쇄할 만큼 풍부한 서비스 및 투자가 인도로 유입되고 있어, 인도 정부는 이와 같은 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음.
- 싱가포르 재무부의 투자지주회사인 테마섹이 인도의 금융기관이나 유망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2005년부터 진출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라. 중국 견제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 인도는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논의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FTA 창설에서 주도적 입지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를 도모함.
- 최근 고속성장을 하는 중국이 ASEAN 등과의 FTA에 적극 나서는 등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급속하게 확대함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는 동방정책³⁾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음.
-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 자유무역지대 창설논의에 주도적 입지를 구축하는 한편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세력으로 적절하게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이미 인도, 일본, 미국, 호주를 포함하는 4자 동맹(Quadrilateral Strategic Force)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으며, 인도는 중국에 대해 협력과 견제 모두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인도 신(親) FTA 정책의 효과와 전망

- 새로운 FTA 전략하에서 추진되는 동시다발적이고 광범위한 FTA가 실현된다면 인도는 대외 경제협력의 파트너 및 분야를 다각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인도는 FTA를 통해서 경제협력 파트너를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IT와 의료 분야 등 전문인력의 진출, 투자 유치 등 협력분야를 다각화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인도가 추진 중인 광범위한 FTA 체결에 성공한다면 교역 확대와 제조업 발전,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으로 더욱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한편 중국과 함께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임.
- 중단기적으로는 인도가 경제성장과 지역협력 달성이라는 실리적인 목표 아래 FTA를 추진함에 따라, 기술 및 투자 협력이 용이한 국가와의 FTA는 빠르게 타결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효

3)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은 1993년부터 추진해온 아시아와 연계한 발전정책으로써 최근 인도 외교정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과가 작거나 제조업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와의 FTA는 지연 또는 연기될 전망이다.

- 태국 및 ASEAN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추진된 한국 및 일본과의 FTA는 투자와 기술이전 효과를 고려하여 기대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FTA 타결 전망도 밝음.
- 한국과의 FTA 협상은 2005년 공동연구를 마치고 2006년 3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07년 12월 말 9차 협상을 마쳤으며, 일본과의 CECA 협상은 2007년 1월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 3차 협상을 마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ASEAN과의 FTA에서는 상품수지 적자폭을 조정하기 위하여 네거티브 리스트와 민감품목 선정에 대한 협상의 강도를 높이면서 2007년 1월로 예정된 발효시기가 지연되는 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음.⁴⁾
- 관세 철폐시 제조업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는 RTA를 맺어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시장 개방의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양국간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는 명분을 추구할 가능성도 높음.
- 그러나 인도가 동시에 여러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추진함에 따라 개별 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편, 상품시장 보호를 위한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개별 협상의 진행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 인도는 한국, 일본, EU, 모리셔스 등과 현재 협상 중에 있으며, 한정된 인력으로 주요 경제대국과의 FTA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협상의 내용은 물론 시기 조정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인도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나친 양허제외 및 민감품목 채택, 높은 수준의 원산지규정을 요구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태국, ASEAN, 한국, 일본 등과의 FTA 협상이 거의 대부분 지연되거나 연기되고 있음.
- 인도는 태국과의 조기관세자유화 실시 이후의 FTA를 모두 경제협력협정 또는 경제동반자협정으로 명명하면서 상품보다는 투자 및 서비스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전략이 내부적으로 인도 정부의 FTA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음.

4) 인도는 팜오일, 커피, 고추 등을 ASEAN 측 민감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인도가 비교우위에 있는 인력이동 협력은 현재 싱가포르 외에는 협의된 FTA가 없으며, 한국과의 FTA인 CEPA를 포함하여 향후 인도 FTA 체결은 인력이동 분야에 대한 합의 여부가 중요한 관건으로 부상함.
- 또한 멀지 않은 장래에 상대적으로 제조업 강국인 한국 및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는데 있어 국내 여론과 국회를 설득하는 문제는 FTA 발효의 관건이 될 것임.

4. 평가 및 시사점

- 인도 정부는 인도 경제가 지속적인 고성장을 이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다각적이면서도 선별적인 FTA를 추진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에게 경쟁심을 유발시킴으로써 FTA에 레버리지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
- 한국 및 일본과 동시에 FTA를 추진함으로써 양국이 인도 진출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하여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자세로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제조업이 취약하나 서비스업이 강한 인도 산업의 특징을 토대로 비교우위 분야를 강조하는 인도 고유의 FTA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내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음.
- 인도는 인력이동, IT 및 투자 협력 강화 등 인도의 강점 분야를 FTA 정책의 우선 분야로 선정하고, 모든 협상에서 이러한 분야가 FTA 협상의 주요 쟁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협상대상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함.
- 이와 더불어 FTA가 제조업시장 개방을 통해 국내 산업에 위기를 가져오기보다는 투자유치 및 인력의 해외진출을 통해 더욱 많은 경제적 혜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인도 내부적으로 FTA의 반감을 축소하는데 성공하고 있음.
- 인도는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수단으로 FTA 정책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이면서도 선별적인 협력모델을 만들고 있음.
- 동방정책의 주요 대상국인 한·중·일에 대하여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함. 즉, 한국과는 조

기에 FTA를 마무리하고, 일본과 집중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하며, 중국과는 FTA와 성격이 다른 RTA 수준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미국과 같은 국가와는 특별히 FTA를 추진하지 않고 인력 및 IT 분야 협력 등에 집중하는 반면, 정치 및 군사력 협력관계를 추진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동시에 세력균형을 달성하고 있음.
- 인도 FTA 정책의 변화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역뿐만 아니라 지역 질서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력구조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한국도 이에 대비하여 현재 9차까지 협상을 마친 인도와의 FTA를 조기에 타결하여 상대적으로 인도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한·인도 FTA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한·미 FTA 또는 한·EU FTA와 같이 높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인력이동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여 보다 진전된 협력이 가능한 협상전략이 요구됨.
- 인도의 FTA 정책은 다각적이면서도 선별적인 FTA 추진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FTA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음.
 - 한국은 한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을 충분히 살리는 한편 다양한 국가 및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토대로 FTA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고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선도적인 FTA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